
해양수산부 2018년 업무계획

2018.



해양수산부



목 차



I. 기관현황	1
II. 2017년 성과와 평가	5
III. 2018년 업무추진 여건	7
IV. 2018년 업무추진방향	8
V. 주요업무 추진계획	9
1. 2018년을 해운항만산업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10
2.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혁신형 해양수산업을 만들겠습니다.	14
3. 연안·어촌 개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22
4.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27
5.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안전한 바다를 실현하겠습니다.	33
6. 해양문화를 확산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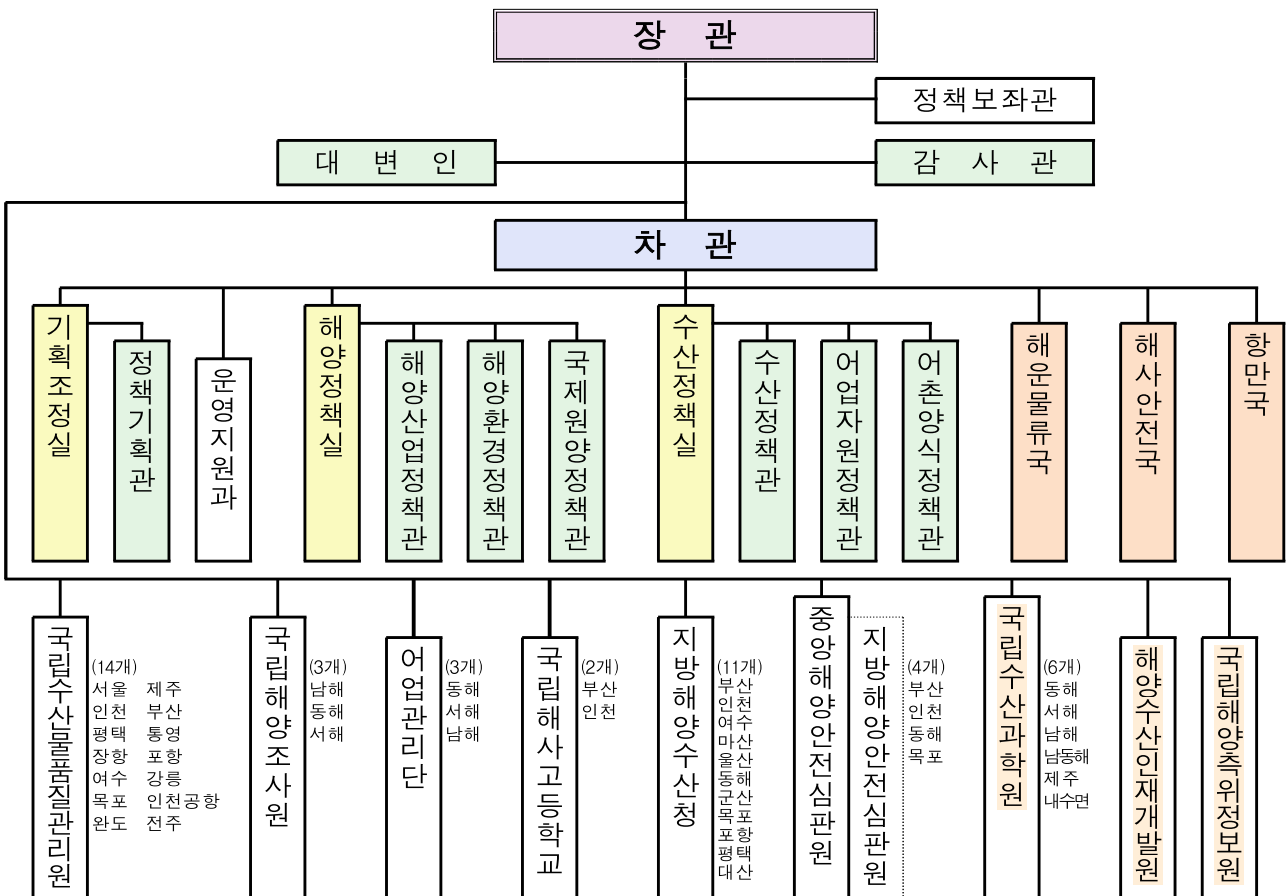
I. 기관 현황

1 주요 소관업무

- ◆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해양자원 개발 및 미래 해양신산업을 육성
- ◆ 첨단 양식, 유통·가공 혁신, 수출 확대를 통해 수산업을 미래산업화
- ◆ 어항개발·어촌관광 확대로 어촌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어업소득을 증대
- ◆ 해운·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크루즈·마리나산업을 육성
- ◆ 연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환경을 보전
- ◆ 해양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바다를 구현

2 조 직

- ◆ 본부 : 1차관 3실 3국 9관(44과 3팀)
- ◆ 소속기관 : 69개(1차 22개, 2차 39개, 3차 8개) * 책임운영기관 : 3개



3 소관 법률(104개)

◆ 총 104개 법률 : 해양 23, 수산 43, 해운항만 21, 해사안전 11, 기타 6
 - 공동소관 29개 (해양4, 수산20, 해운1, 해사3, 기타1) 포함

*괄호 안은 공동법률

소관	주요 법률
해양 및 해양환경 2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연안관리법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등 · (공동)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등
수 산 4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 내수면어업법, 어촌·어항법,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낚시관리 및 육성법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어선법 · 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 소금산업진흥법 등 · (공동)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해운·항만 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 해운법, 항만운송사업법, 도선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선원법, 선박직원법, 국제선박등록법, 선박투자회사법, 선박관리산업발전법 · 항만법, 항만공사법, 신항만건설촉진법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등 · (공동) 물류정책기본법
해사안전 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법, 선박등기법, 해사안전법, 항로표지법, 선박평형수 관리법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 (공동) 선박등기법,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기 타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특별법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 (공동)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4 예 산

□ 2018년 총지출(세출예산 + 기금) 규모 : 5조 458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17년		'18년(B)	증감(B-A, %)
	본예산(A)	추경		
총 지 출	49,764	49,910	50,458	694(1.4%)
(세출예산)	43,878	44,024	45,184	1,306(3.0%)
(수발기금)	5,886	5,886	5,273	△ 613(10.4%)

□ 중점 투자분야

- 해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 친환경 선박 대체건조 지원, 공공선박 발주 등 해운·조선 상생협력체계 구축
- 수산물 수출지원센터 확대 등 수산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해양공간계획 수립, 대형방제선 건조 등 해양환경 관리역량 강화
- 연안여객선 현대화, 준공영제 확대 등 안전한 연안여객체계를 구축하고 태풍·지진 등 재난에 대비하여 연안과 항만 취약시설 정비
- 해양산업클러스터, 항만재개발 등 항만을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고, 마리나항만, 해양치유기술 개발 등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LNG 병커링, 수중이동통신 등 신산업 기술을 개발하고,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등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

□ 분야별 지출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17년		'18년 (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 총지출	49,764	49,910	50,458	694	1.4
○ 해운·항만	17,607	17,642	17,644	37	0.2
○ 물류 등 기타	6,742	6,747	6,873	132	2.0
○ 수산·어촌	21,208	21,313	21,573	365	1.7
○ 해양환경	2,270	2,270	2,409	139	6.1
○ 과학기술연구지원	1,937	1,937	1,958	21	1.1

- ◆ 공공기관은 총 17개 : 공기업 5개(시장형 1, 준시장형 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개, 기타 공공기관 8개

기관 구분	기능 및 역할
■ 시장형 공기업(1개)	
부산항만공사	· 부산항의 개발과 관리·운영
■ 준시장형 공기업(4개)	
인천항만공사	· 인천항의 개발과 관리·운영
여수광양항만공사	· 여수·광양항의 개발과 관리·운영
울산항만공사	· 울산항의 개발과 관리·운영
해양환경관리공단	· 해양환경 개선사업 및 해양오염 방지활동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4개)	
선박안전기술공단	· 선박검사업무와 관련기술 연구·개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해양수산 인력의 교육·훈련 및 해기사 시험관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바다숲·연안바다목장 등 수산자원 조성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해양과학기술정책 지원 및 R&D 기획·관리
■ 기타 공공기관(8개)	
(주)부산항보안공사	· 부산 북항 경비·보안 업무
인천항보안공사(주)	· 인천항 경비·보안 업무
항로표지기술협회	· 항로표지 제작과 관련 기술 연구·개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해양과학기술개발 및 연구 등
한국어촌어항협회	· 어촌어항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조사·연구
한국해양조사협회	· 해저 지형·수로 조사 및 해양관측시설 관리 등
국립해양박물관	· 해양문화와 해양산업 유산발굴·보존·연구·전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전시·교육

II. 2017년 성과와 평가

◆ 해양수산업 침체 극복을 위해 **글로벌 해양강국 비전 재정립**
⇒ 해운·수산 등 해양수산업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제도적 기반 마련**

1 해양분야: 新해양관광·레저 산업 발굴 및 대양·극지연구 확대

- 「수중레저법」 제정·시행('17.5), 해양자원환경을 활용한 해양치유*·해양생태·갯벌관광 등 **新해양관광·레저 산업 발굴**
 - * 해양치유자원 실용화 연구 협력 지자체 선정: 태안, 완도, 고성, 울진('17.10)
 - 거점마리나 구축, 규제합리화 등으로 **마리나 대중화를 추진***하고, **크루즈 항로 다각화**를 위한 Port-Sales('17, 6회)·인프라 확대**
 - * 마리나 업체수 증가('16, 69개 → '17, 97개 / 전년대비 40% 증가)
 - ** 속초 크루즈 부두·터미널 완공('17.9), 제주강정 크루즈 지원시설 완공('17.10) 등
- 대형 과학조사선(이사부호)의 첫 대양 탐사('17.5)와 남극점까지의 **코리안루트*** 개척 착수('17.3) 등 해양·극지 연구 선도국가로 발돋움
 - * 장보고기지~남극점까지 육상루트, 총 3,000km, '17~'21 / '17년 300km

◆ (한계) 해양관광·레저 수요 증가를 뒷받침할 다양한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 (여름·해변 집중)으로 새로운 해양관광·레저 분야 개발·확산 필요

2 수산분야: 수산물 수출산업 성장과 수산자원 정책 강화

- 김 글로벌 식품화를 통해 김 수출 5억불을 달성(전년대비 45% ↑)하고
 - 수산 식품가공단지 조성('17, 2개소/누적 11) 등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통해 사상 최초로 수산가공품 수출 9억불(수출비중 39%) 돌파
- 금어기 확대(주꾸미, 문어 등),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명태 인공종자 대량방류 시행('17, 30만마리) 등을 통해 수산자원 관리 강화
 - * 바다숲('17, 3,043ha/누적 15,251ha)·바다목장('17, 울릉 등 4개소/누적 30개소)
 - 양식면허 확대, 친환경 양식기술 보급 등으로 양식생산이 대폭 증가('16, 184만톤 → '17, 216만톤)

◆ (한계) 수산자원 회복 정책의 가시적인 효과 달성(어획량 등)에는 한계가 있으며, 수산업의 노령화·영세성 등의 극복으로 사양 산업이라는 인식 탈피 필요

3 해운·항만분야: 해운산업 재건 기반 마련

- 해운 지원 전담기관인 해양진흥공사 설립을 확정*하고, 국적선사간 한국해운연합(KSP)을 결성('17.8~)하여 경쟁력 회복 기반 마련

* 법정자본금 5조원 규모의 해양진흥공사 설립법안 국회통과('17.12)

- 한진해운 파산에도 전략적 인센티브, 인프라 적기 지원 등을 통해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2천만TEU, 인천항 3백만TEU 돌파

* 부산항: 인센티브 확대(208→288억원), 주요선사 아태지역 본부 방문 마케팅 등
인천항: 인천신항 부분 개장('17.4) 인천 신항 1-1단계 완전개장('17.11)

-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17.12), 부산·인천 등 도심과 연계된 항만 재개발을 통해 기존 항만기능을 물류에서 경제거점으로 확장

◆ (한계)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제도 정비는 완료했으나, 해운 불황 지속, 현재 제도 도입단계로 본격적인 효과 확산·체감까지는 다소 시간 필요

4 해양영토/환경/안전: 대응역량 강화 및 통합 환경관리 제도 도입

- 영해기점 영구시설물 추가 설치('17, 2개), 남해어업관리단 신설('17.6), 해수부·해경 합동 단속, 단속선 접안시설 확충 등 해양영토 관리기반 강화*

* 불법조업 단속 건수: 405건('16) → 278건('17) / 전년대비 31% 감소

- 한·중 어업공동위원회('17.11) 등을 통해 한·중 불법조업 공동대응 체계 강화 기반 마련(중국 입어 어선 감축, 공동단속 시스템 운영 등)

- 해양환경분야의 기본법인 「해양환경보전법」을 제정('17.3)하고,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해양공간계획법」 제정('17.8 발의) 추진

◆ (한계) 영흥도 급유선-낙시어선 충돌사고('17.12), 추자도 어선 전복사고('17.12) 등 연이은 인명 사고로 인해 해양안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 초래

- 흥진호 피랍 사건으로 조업어선의 피랍 및 월선조업 방지 대책 마련 필요

Ⅲ. 2018년 업무추진 여건

- (경제전반) 최근 세계경제 회복 등에 따라, '18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 중반대, 우리나라는 3% 내외 성장 전망(OECD, 한국은행 등)
 - * 세계 3.7% / 한국 3.0%(OECD,'17.11), 세계 3.6% / 한국 2.9%(한은,'17.10)

 - (해양수산업) 세계 해양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나, 전통 산업(조선·해운 등) 침체로 국내 해양산업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 예상
 - * 해양산업 총 부가가치는 ('10) \$1.5조 → ('30) \$3조로 증가 전망(OECD, '16)
 - 세계 경제회복 등으로 해운경기의 소폭 반등이 예상되나 본격 회복은 시간 필요, 중·일 항만 인프라 확대·스마트화로 항만산업 경쟁은 심화
 - 관광·레저 수요 증대로 해양관광이 지역경제의 주요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탈원전 등으로 해양에너지의 중요성도 증대
 - * 취업유발효과(10억원당 취업자수) : 서비스업(7.3), 제조업(8.8), 관광업(18.9)
 - 양식 생산량은 기술발전 등으로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며, 수산물 수출 증가**와 함께 수출품목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필요
 - * 생산량(만톤) : ('16) 184 → ('17^e) 216 / 생산금액(조원) : ('16) 2.35 → ('17^e) 2.76
-
- (수산자원·해양환경) 연근해 어획량 감소 추세는 다소 완화('12, 109만톤 → '14, 106 → '16, 93 → '17, 93)되고 있으나,
 - 수산자원·해양공간의 이용과 보전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갈등(금어기 확대, 바닷모래 채취 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 (해양영토·해양안전)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동해 불법조업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지속적인 대응강화 필요
 - *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건수: 568척('15) → 405척('16) → 278척('17)
 -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해양안전관리 및 대응능력 강화 필요성 증대

IV. 2018년 업무추진 방향

- ◆ (국정과제 성과 창출) '17년 마련된 기반을 바탕으로 해운산업 재건, 해양영토 수호·해양환경·안전 확보 등 성과 가시화
- ◆ (바다를 통한 국정기조 실현) 혁신성장, 지역균형발전 등 국정기조를 실현하기 위해 해양수산 정책 수단을 종합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① 해운산업 재도약과 해양수산업의 혁신산업화

(☞ 국정과제 80, 해운강국 건설 및 혁신성장 추진)

- 해운산업 재건 계획 수립, 해양진흥공사 설립, 친환경 보조금 제도 등으로 전방위적으로 해운산업을 지원하고 항만 경쟁력 확보도 추진
 - 첨단·고급 양식산업, 수산물의 수출전략 산업화, 해양신산업 육성과 함께, 스마트 해산물류 실현 등 혁신성장 선도과제 추진 본격화
- ⇒ 해운·수산 등 주력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관련 일자리를 안정화시키고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창출

② 연안·어촌지역 발전과 수산자원 회복 등 추진

(☞ 국정과제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및 지역균형발전 실현)

- 연안·어촌을 지역경제 핵심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규모 어촌 인프라 개선, 해양관광·레저, 항만 재개발 등 정책 역량 집중
 -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제도정비(휴어제 등)와 자원회복 사업(바다숲 등)을 확대하고, 해양공간계획 제도 도입 등 해양환경 통합관리 체계 구축
- ⇒ 어촌뉴딜 300, 수산자원회복,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등을 통해 어가 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 지역 일자리도 창출

③ 해양영토 수호 역량 강화와 해양사고 예방·피해 저감

(☞ 국정과제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 관련 인프라 확충 등 역량강화와 국제협력을 통해 해양영토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V. 주요업무 추진계획

비전	“글로벌 해양강국, 대한민국”
18년 목표	강한 해양수산업으로 재도약 ※ 해운산업 NEW START, 해양수산업의 혁신산업화

주요 정책

① 2018년을 해운항만 산업 재도약 원년 으로 만들겠습니다.	① 해운산업 New Start ② 항만운영 개혁과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③ 항만 인프라 확충을 통한 물류 거점화
②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혁신형 해양수산업을 만들겠습니다.	① 스마트·친환경 해상물류 실현 ② 양식산업의 스마트화·고급화 ③ 수산물 수출전략 산업화 및 유통체계 개편 ④ MT(해양과학기술)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 ⑤ 해양수산 창업·벤처 활성화
③ 연안·어촌 개발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① 어촌 뉴딜 300 등을 통한 활력넘치는 어촌 조성 ② 해양관광·레저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③ 항만을 연안지역 경제의 핵심 축으로 육성 ④ 연안지역 해상교통 선진화
④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① 우리바다 되살리기와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 육성 ② 수산물 신뢰성 확보 ③ 해양공간 통합관리 체계 구축 ④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
⑤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안전한 바다를 실현하겠습니다.	① 해양영토 관리기반 강화 및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② 촘촘한 해양사고 예방체계 구축 ③ 해양재난·재해 피해 예측 및 대응능력 강화
⑥ 해양문화를 확산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① 親해양문화 확산 및 관련 인프라 확충 ② 해외 해양수산 자원 확보 및 대양·극지 연구 선도 ③ 해양수산 국제 위상 강화

① 2018년을 해운항만산업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중장기 목표 (~'22)		세계 5위 해운강국 재도약 (해운산업 매출액: '16, 29조원 → '22, 50조원)
'18년	정책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산업 재건프로그램 본격 운영 ◆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체계 개편·인프라 확충
	핵심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운영 ② K-GTO 설립 및 중장기 육성방안 마련 ③ 항만 인프라 확충 / 항만별 특화 개발

가. 해운산업 New Start

①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수립·추진

- 원양·벌크 등 선사 유형별 선박·물동량 지원과 경영 안정화 정책을 포함한 「해운산업 재건 5개년 계획*」 수립·추진('18.2)

* '22년까지 매출액 회복('16, 29조원→'22, 50조원), 영업이익율 제고('16, 1.3% →'22, 6.2%) 등 해운산업 재건 도모

②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등 해운지원 Program 본격 운영

- '18.7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 설립과 동시에 해운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운영방안* 마련('18.上)

* 파일럿 프로그램 개발, 초년도 사업계획 마련, 인력 사전교육 실시 등

- 공사 초기 자본금(3.1조원)을 활용하여 선박 신조 발주와 선사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금융 사각지대*도 보완('18.7~)

* 선사 부채비율 완화, 컨테이너박스, 카페리 등 맞춤형 금융 프로그램 개발

③ 해운-조선, 선주-화주간 상생을 통한 질적 성장

- 해운-조선 **상생협약체**(‘16,12 MOU체결 / ‘17, 10회 개최)를 고위급(차관급)으로 격상하여 **정책지원 체계 확대 및 정책공조 강화**
 - 「**친환경 선박 대체 보조금**」 제도를 도입(‘18.1)하여, 해운산업의 선대 경쟁력 강화와 조선산업 물량확보를 **동시 지원**
- 해상운송의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종합심사 낙찰기준을 마련**(‘18.上)하고, **시범사업**(‘18.下)을 통해 선·화주 상생 기반 구축
- 국적선사간 **과잉경쟁 방지**와 해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복항로 구조조정과 신항로 개척을 본격 추진**(‘18.上, 한국해운연합)
 - * 1차 구조조정 : 한-일, 한-태국 항로 구조조정(14척→7척), 선박 공동 투입·운항(‘18.上)
한-인도네시아 2차 구조조정 방안 확정(‘18.1) 및 신항로 개척 추진(인센티브 검토)

나. 항만운영 개혁과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① 항만운영체제 개편

- 대형 해운 얼라이언스에 대응하여 부산 신항에 「**국적 물류기업 연합 터미널**」 **확보*** 추진(‘18.下, 국적선사·운영사·항만공사 등)
 - * 터미널별로 중복 운영 중인 부대서비스(컨테이너 수리·세척, 검역·통관 등)를 통합하고 기능을 재배치하여 시설활용 극대화 및 경쟁력 강화
 - 국적 선사의 부산 신항 터미널 운영권 추가 확보를 위한 부산항만공사, 해양진흥공사 등의 참여방안 검토
 - 아울러, 부산 북항 하역시장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 3개 운영사를 1~2개 운영사로 통합(‘18.下)
- 인천항 운영효율성 강화와 업체간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인천항 통합 부두운영사 출범**(‘18.4, 기존 10개社→ 1개社)

②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 육성을 통한 국제 물류네트워크 확보

- 선사, 하역사, 공사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터미널운영사*(K-GTO)를 통하여 아시아권 터미널 확보 우선 추진**

* GTO(Global Terminal Operators) : 복수 국가에서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는 기업

** 투자타당성 검토를 통해 타당성 확보시 해외 운영사 등과 협의('18.上)

- “K-GTO 중장기 육성방안”을 수립('18.12)하고 인도·중동 등으로 진출하여 글로벌 항만 운영사로 도약

③ 비상시 안정적인 항만운영능력 확보

- 물류기능 마비 등 긴급 상황에도 안정적인 항만운영이 가능하도록 「국가필수해운항만제도*」 도입('18.上, 법률 제정 추진)

* 국가가 필수화물 수송용 선대 보유·운영, 항만별 필수 항만운영사업체 지정

- 제도도입을 위해 이해 관계자 협의체를 구성·운영('18.1~)하고, 항만별 항만운영협약, 지원체계 등을 구체화('18.上)

- 예선시장 안정화를 위해 예선 수급계획 수립과 서비스평가제를 도입('18.下)하고 도선안전 강화를 위하여 도선면허 세분화 등 추진

④ 해운·항만 전문인력 확보

- 선원 수요·공급 전망*, 교육·훈련 제도 등을 포함한 선원 수급 중장기계획(5년)을 수립('18.下)하고, 실습 인프라** 지속 확대

* 선원양성 다변화, 외국인선원 고용제도·관리 체계 등 해기 인력 공급 전략 마련

** 해양플랜트 종합훈련장('16~'19, 201억원/'18, 33억원), 서해권 종합비상훈련장('16~'19, 133억원/'18, 50억원) 등 실습 인프라 확대

- 선원의 장기근속,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선원복지고용센터 지역사무소 추가 개소('17, 포항·제주 2개소 → '18, 3개소/목포 추가)

- 항만물류 종사자,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선진 물류현장 실습, 전문교육 등 인재 육성 사업('18, 1,300명/15개사업단) 시행

다. 항만 인프라 확충을 통한 물류 거점화

① 글로벌 항만 경쟁력 강화

- 부산 신항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장기 물동량·선박 대형화 등에 대응한 「중장기 부산항 메가포트 육성전략」(‘18.下) 수립
 - * 컨테이너 부두 추가 개발(6선석, ~’21), 항만배후단지 준공(‘18.下, 50만㎡), 대형선박수리단지 조성(‘18.上, 민자협상) 등
- 인천신항은 최근 개장한 ‘퀵’터미널(‘17.11) 활성화를 위해 항만배후 단지를 조기 공급(‘18.下, 66만㎡)
-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대형 ‘퀵’ 크레인을 추가 운영(‘18.1, 1→4기)하고 배후단지 전력시설 확충 및 석유화학부두 증설(‘18, 설계)
- 세계 4대 액체항만인 울산항은 동북아 오일허브 1단계 사업 민간 투자자(액체저장시설) 유치(‘18.上)로 개발 가시화
-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등 기반 인프라*를 차질없이 조성하고, 부두 시설은 선박대형화에 따른 사업계획 재검토를 통해 적기 추진
 - * 진입도로 0.7km, 가호안 0.8km 등 / 2,294억원 / ‘17~’22(‘17.12월 착공)

② 주요지역 거점항만 특화개발

- 항만의 물류기능 강화를 위해 배후단지를 추가 공급(3개소)*하고, 평택·당진항 배후단지는 국내 최초로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18.下, 착공)
 - * 마산항 등 7개항 1,196만㎡(‘17) → 평택·당진항, 목포항, 포항항 203만㎡ 추가 공급(‘18)
- 항만 배후산업 지원을 위해 평택당진항(자동차 1선석, ‘18, 준공), 동해항(석탄 1선석, ‘18, 착공), 목포항(철재 1선석, ‘18, 준공) 등 인프라 공급

③ 우리기업의 해외 수주지원 강화

- 해외 항만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국제세미나, ‘18.2)하고, 해외 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등 우리기업 진출기반 조성(‘18, 42억원)
- 해외 항만개발 프로젝트 금융 지원을 위해 정부·금융기관 출자 등을 통한 해외항만개발 특화펀드 조성 방안 마련(‘18)

②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혁신형 해양수산업을 만들겠습니다.

중장기 목표 (~'22)		해양수산 전분야(해양·수산·해운·항만)에서 혁신성장 성공사례 창출
'18년	정책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해산물류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점 추진 ◆ 해양기반 신산업 실용화 본격 추진 ◆ 수산식품의 수출전략 산업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핵심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스마트 해산물류체계 구축 ②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및 양식산업 고부가가치화 ③ 수산물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가. 스마트·친환경 해산물류 실현

① 스마트 해산물류체계 구축

※ 국가물류체계 혁신을 위해 자율운항선박-해상통신망-스마트 항만 등을 통합 연계하는 「스마트 해산물류 구축전략」 마련·추진('18.上, 혁신성장 선도사업)

○ 자율운항선박 개발 본격화를 위해 무인선 제작·상용화*, R&D 기획 연구(~'18.4)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18.下) 추진

* 자율운항이 가능한 소형 무인선 제작을 완료('18.上)하고, 핵심기술(무인선 선체설계 등)의 민간이전 및 상용화 방안 마련('18.下)

○ 사고예방, 정보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해 연안 100km(現 30km)까지 통신이 가능한 해상 초고속무선통신망(LTE-M) 구축 착수('18.6~'20)

* ('18) 동·서해 388개 기지국 설치 → ('19) 남해 구축 → ('20) 쏜해역 시범사업 시행

○ 스마트 항만 실현을 위해 부산 신항에 터미널간 화물정보공유 시스템을 시범 운영('18.下)하고, 신규 터미널 하역 자동화 추진

- 선박 육상전원공급장치 설치('18, 부산 등 6개 선석), 야드트랙터 연료 전환사업 확대(경유→LNG/'17, 35대→'18, 100대) 등 항만 환경 개선

② 국제 규제 등을 발판으로 세계시장 진출

- 선박 배출가스 규제('20~)에 대응하여 미세먼지 저감장치*, 배출가스 처리장치 개발·상용화**와 친환경 선박 지원법(국회계류 중) 제정 추진
 - * 소형선박용(400KW) 저감장치 상용화('18~), 중·대형(3MW) 선박용 시제품 개발('18) 및 실증('19) / ** 친환경 선박기술 개발('18~, 33억원)
- 차세대 해양안전 종합관리체계(e-Nav) 시장 선점('20~'30, 1,200조원)을 위해 한국형 e-Nav 기술개발('16~/ '18, 289억원) 지속 추진
 - * e-Nav 핵심 서비스 통합시험 시설을 구축('18.上)하고, 정보수집·활용과 시스템 운용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18.下) 추진

나. 양식 산업의 스마트화·고급화

① 스마트 양식시스템 개발 및 확산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첨단양식 기술개발 마스터 플랜'을 수립('18.5)하여, 향후 5년 간 정책 및 R&D 방향성 정립
- 자동화·지능화된 양식 Business 모델 창출을 위해 스마트 육상 양식 단지 조성*('18~'20, 경남 고성/혁신성장 선도사업)
 - * 양식단지 조성·운영을 위해 기업·지역어민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18.下)
- 스마트폰, IoT 기술 등을 활용한 첨단·친환경 양식기술의 민간 보급을 위한 공모·지원사업 추진('18, 132억원/20개소, 정부·지자체 60% 지원)

② 고급 양식품종의 상업화 및 대량생산체계 구축

- 고부가가치 상품인 참다랑어의 상업 출하를 개시('18.5)하고, 안정적인 참다랑어 양식을 위해 치어 공급, 유통, 기자재 개발·보급 체계 구축('18~)
 - * 민간 산업협의회 구성('18.1): 선망업계 등(치어공급), 유통업계(가공·유통), 기자재 업계(외해양식용 소재, 어망, 가두리시설 등 개발·보급 등)
- 전략품목인 뱀장어는 본격적인 사업화를 위해 민·관합동 대량 생산연구 체제로 전환('17, 8.5억원 → '18, 13.5억원)

③ 양식산업의 규모화 및 고부가가치화

- 친환경 양식기법을 적용한 대규모 내수면 양식단지 2개소 조성을 완료('18,괴산/ '19,화순)하고, 1개소 추가 개발 추진('18~'20,남원)
- 내수면(육지 어촌)을 어업 생산중심에서 가공·유통, 지역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화 모델로 조성하여 부가가치 극대화
 - * 식품단지(~'19, 2개소), 유통판매센터(~19, 200억원), 저수지 자원화(~'20, 4개소)
- 대규모 간척지를 첨단양식을 비롯한 농·수산업의 융복합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18.上, 농식품부 협업)
 - * 간척지의 어업활용 면적(889ha) / 종합계획 수립('18.上), 세부전략 마련('18.下)

④ 질병에 강한 예방양식체제로 패러다임 전환

- 질병 등을 유발하는 생사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생사료 유통 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배합사료 사용 확대 로드맵」 마련('18.4)
 - 고품질 배합사료 개발*과 함께 생사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양식산업발전법」 제정 추진/국회 계류 중)
 - * 저어분 배합사료 개발 추진('16~ / '18. 16억원)
- 질병에 강한 우수종자의 개발·보급을 위해 수산 종자산업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종자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18.3)
 - 품목별 우수종자 개발('18, 68억원), 무병 연구 보급센터 건립(새우, '18~'19, 34억원)을 추진

⑤ 고수온 등 기후변화 대응

-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온관측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충('17, 54개소→ '20, 80개소)하고, 「이상수온 자동알림앱」 도입('18)
-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은 저층수 취수를 위해 취수관 보급을 지원(600억원, 금리 1%)하고, 재해예측 정보 시스템*도 구축
 - * 우려 해역의 수온·염분 등을 예측('18~ / '18, 4억원)
-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양식품종의 성장·번식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표준 사육매뉴얼 제작·배포
 - * ('18) 전복, 넙치 → ('19) 조피볼락, 강도다리 → ('20) 돔류, 송어, 쥐치

다. 수산물의 수출전략 산업화 및 유통체계 개편

① 수산식품산업 육성 등을 통한 수출전략 산업화

- 수산물 가공·유통·수출이 결합된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영세 수산가공업체를 집적화한 '수산식품 거점단지' 확대** 병행

* 전남 수출가공클러스터('18~, 980억원, 목포, 예타 중) 부산권('18.上 예타 추진)

** 완공 누계 : ('16) 9개소 → ('17) 11개소(울진, 괴산) → ('18) 13개소(속초, 보령)

- '김' 글로벌 식품화를 위해 수출용 제품 개발, 「마른 김 등급제」 도입 ('18.下) 등을 추진하고, 「어묵산업 발전방안」 수립('18.上)

- 활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제수준의 위생시설을 갖춘 수출물류 센터(수조시설, 오폐수처리 시설 등) 건립* 및 활어 컨테이너 제작 확대**

* 부산 신항, 인천항, 완도항에 각각 1개소 건립(50억원)

** 제작대수 : ('17) 41대 → ('18) 누적 46대 / 운송 지역 : 美 서부 → 美 동부, 캐나다 등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지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산식품에 관한 기본법인 (가칭)'수산식품산업발전법' 제정 추진('18.下)

② 수산물 수출시장 다변화

-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K-SEAFOOD Global Week'를 운영*하고, 보스톤, 브뤼셀 등 국제 수산박람회에 한국관 운영(13회)

* '18.11.(매년 11월 첫째 토요일부터 약 2주간) / 10~15여개 국가 개최

- 해외 수출지원센터를 ASEAN, 美동부 등으로 확대*하고, 민·관합동 시장개척단 파견(연 3회) 등 수출기업 지원 강화(판로개척, 컨설팅 등)

* ('17) 7개소(중국(3)·대만·베트남·미국·일본) → ('18) 10개소(ASEAN, 美동부 등 추가)

③ 전략적 통상협상으로 수산물 무역 여건 개선

- FTA별로 보호가 필요한 품목과 신규시장 진출이 가능한 품목 (김, 넙치 등)을 발굴하여 차별화된 통상전략 수립

*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한-^{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은 상대국 소비시장 분석, 수출 유망품목 발굴

- 협상이 진행 중인 FTA(^{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등)는 기체결 FTA(한-아세안, 한-중) 수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국내 영향 최소화 도모

- 한-미 FTA 개정 협상시 100% 既양허(대부분 '21년, 최장 '26년 개방), 對미 수산물 무역적자('13~'16) 등을 강조하여 추가 개방 최소화

④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만족하는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 산지 거점 유통센터* 확충('18, 3개소 착공)과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18, 1개소 착공)을 통해 수산물 유통단계(6→4단계) 축소 추진

* FPC 건립지역(3개소)은 공모를 통해 선정 예정('18~'19, 72억원/'18, 36억원)

** 호남권 설계('18~'20, 180억원/'18, 7억원), 인천권 착공('16~'19, 378억원/'18, 62억원)

- 자갈치·부산공동어시장 등 주요 수산시장 현대화* 및 유통종합단지 건립**으로 유통·가공·관광을 융합한 수산복합공간 조성

* 자갈치('14~'18, 92억원/'18, 21억원), 부산공동어시장('15~'20, 1,729억원/'18, 127억원)

** 서남권친환경수산종합단지(전남 목포, '14~'19, 294억원/'18, 39억원)

내수면수산물유통판매센터(경기 화성, '16~'19, 200억원/'18, 27억원)

- 수매시기 조정*, 방식 다변화** 등으로 정부비축사업의 실효성을 강화 ('18.上)하고, 「수산물 유통종합정보시스템」구축***으로 수급 안정 도모

* '17(9월이후 집중 수매)→ '18(연초도 수매) / ** '17(산지 수매) → '18(생산 급감 시 수입 및 민간재고 수매) / *** '18~'20(20억) '18(9억원)

라. MT(해양과학기술)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

① 해양심층수·바이오 산업 활성화

- 제조·관광 등 연관산업 집적을 통해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심층수를 동해 연안지역의 대표산업으로 육성

*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 조성방안 수립('18.3), 산업지원센터 준공('18.12)

- 제품 다양화를 위해 심층수 처리수의 식품원료 인정('18.上, 식약처 협조)을 추진하고, 산업범위 확대를 위한 「해양심층수법」 시행령* 개정('18.下)

* 산업범위 : 해양심층수 개발업,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 →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 추가

- 「해양수산 바이오산업 육성방안」을 수립('18.上)하고, 해양수산 생명소재의 산업계 분양을 위한 '해양 바이오뱅크(추출물, 미생물)' 시범운영('18.下)

- 말미잘·홍합 단백질을 활용한 복합지혈제* 시제품 제작('18.下), 실증에 성공한 해양 고세균을 이용한 바이오수소 생산기술 상용화 추진(~'19)

* '19년 상용화를 목표로 벤처기업(네이처글루텍)에 기술이전 추진

② LNG 추진선박·해양플랜트 서비스 등 신시장 개척

- LNG 추진선박 운항 대비 「LNG연료공급 인프라 구축 방안」을 수립('18.4) 하고, LNG공급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과 병행하여 국제협력** 강화

* LNG빙커링 R&D('18, 31억원), LNG 공급인프라 구축('18~'19, 131억원, 가스공사)

** (싱가포르) LNG선 운영관련 공동연구,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 인니 해양플랜트 해체사업* 등 타당성조사 지원, 시장설명회 개최, 입찰·현지업체 관련 정보제공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인니 해상의 노후 플랜트 해체 타당성조사('17.6~'18.5) → 해체사업 수주 지원('18~)

③ 해양에너지 실증·상용화 기반 마련

- 1.5GW 규모의 파력·조류, 해수온도차 발전 등 해양에너지 보급·확대 등을 위한 「2030 해양에너지 개발계획」 마련('18.3)
- 조류, 파력 등 대규모 인프라 조성을 위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실험역 시험장** 조성 추진
 - * 파력(30~50kW, '16~'20) : '18년 17억원
 - ** 조류(4.5MW/진도, '17~'21) : '18년 11억원 / 파력(5MW/제주, '16~'19) : '18년 64억원
- 해수온도차 발전의 상용화 모듈인 1MW급 발전플랜트 개발*을 추진하고, 키리바시 실험역 실증**을 위한 MOU 체결('18.上)
 - * 해수온도차 발전플랜트(1MW, '16~'20) : '18년 44억원
 - ** 키리바시 실험역 실증('20) 지원을 위한 한-키리바시간 MOU 체결 추진

④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적용한 해양수산 신산업 발굴

- 기술·동향분석 등을 통해 해양장비의 활용분야를 다양화하고, 차세대 핵심기술 선정* 등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18.3)
 - * 핵심기술 개발(안) : (동해)해저로봇을 활용한 해양개발 네트워크, (서해)해양사고 구조·구난 플랫폼, (남해)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해양환경 빅데이터 구축
- 해양구조물 시공, 유지·관리 등을 위한 수중로봇 개발*(18, 77억원)을 완료하고, 핵심기술(로봇팔, 수중카메라 등) 민간기업 이전 추진('18.下)
 - * 최대 2,500m 수심에서 수중환경조사, 해저케이블 매설, 수중 구조물 설치 등 수행
 - 수중건설로봇에 대한 실험역 시험·평가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장비 개발→성능시험→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마련('18.上)
 - * 다목적 시험·평가지 시스템 건조 및 장비 구축, 시험·평가지원동 건립('18, 10억)
- 수중 장거리(30km) 무선통신 성공('17.5)에 이은 근거리(200m) 고속통신* 실험역 테스트('18.上) 및 민간 참여를 통한 상용화 추진('18.下)
 - * 현재 10kbps 수준을 100kbps(1초당 한 개의 이미지 파일 전송가능)로 증가

마. 해양수산 창업·벤처 활성화

① 맞춤형 창업 컨설팅

- 창업·투자 전담기관을 지정('18.上)하여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해 **쏠주기 인큐베이팅**(‘18, 9억원) 지원
 - * 창업단계별 교육, 전문가 컨설팅, 투자유치·자금 지원 등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예비창업·유망기업 발굴·지원을 위한 **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운영*(부산·제주·경북·강원)하고 **추가 확대**(1개소)
 - * ('17년 실적) 167개 업체 지원, 매출액·신규고용 각 17%, 965명 증가

② R&D와 연계한 창업·사업화 지원시스템 구축

- 산업계 전용R&D(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창업기업 의무지원 비율을 도입***하고, **창업기업 전용 R&D 신설** 검토·추진('18, 기획연구)
 - *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 의무 지원 기준: ('18) 40% → ('20) 50% → ('22) 55%
-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기업의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R&D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R&D' 시범 도입**(‘18, 7.5억원)

③ 유망기업 자금지원 강화

- **수산분야 유망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150억원 수준**(정부 100, 민간 50억원)의 **수산펀드 추가 조성**(‘18.上)
 - *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모험펀드와 연계하여 지원규모 추가 확대 예정('18.下)
 -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위해 개선된 조건*으로 **사업화자금 지원 확대**(용자가액: '17 10억원→ '18, 80억원)
 - * ('17) 금리 3%, 지원한도 5억원(직접용자) → ('18) 금리 2.5%, 지원한도 10억원(이차보전)
- **모태펀드를 해양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추진**(‘18, 기획연구 → '19, 펀드 조성)하고, **해양수산 투자유치 설명회**(‘18.下) 등 개최

3 연안·어촌 개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중장기 목표 (~'22)		연안을 지역경제와 관광 중심지로 개발
'18년	정책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어촌 인프라 현대화 기반 마련 ◆ 지역경제·관광과 연계한 항만·어항 개발
	핵심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어촌 뉴딜 300 계획 수립·시행 ② 항만 재개발을 통한 해양문화·관광 도시 개발 ③ 귀어·귀촌 지원 강화(진입장벽 완화, 정착 지원 등)

가. 어촌 뉴딜 300 사업 등을 통한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

1 어촌 뉴딜 300 사업 추진

- 낙후된 소규모 어항·포구를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재창조하기 위해 「어촌뉴딜300 종합계획*」 수립('18.上)

* 소외된 도서지역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감소 방지로 어촌 지역 활력 제고, 국민 여가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 소규모 어항·포구(2,400여개) 중 개선이 시급한 300개소를 선정하여 특성·여건에 따라 유형화하고 단계적으로 정비

* 해상교통시설 정비형, 해양재난사고 대응형, 어촌마을 재생형, 어촌관광 수요창출형

2 어촌개발과 특화발전 지원

- 귀어·귀촌인과 기존 주민이 어울릴 수 있도록 기반시설, 의료·문화·교육 시설 등을 정비·개발하는 「漁울림 마을 조성계획」 수립('18.下)
- 생활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주거 리모델링 등 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 지속 추진('18, 31개 시·군/850억원)
- 연안의 모든 시·도로 어촌특화지원센터*를 확대('17, 4개소→'18, 10개소)하여 어촌자원·특산품의 상품화 지원

* 상품개발, 마케팅, 창업·컨설팅, 어촌개발사업, 마을홍보 등 지원

③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어촌 조성

-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18, 수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40세미만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월 1백만원, 최장 3년/신규)
* (기존) 수협조합원만 어촌계 가입 → (개선) 어업인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
- 청년 유입 촉진을 위해 귀어·귀촌인에 대한 창업·주택 자금 지원 ('18, 500억원)과 귀어학교 확충('17, 2개소 → '18, 3개소)

④ 어가·어선원에 대한 복지망 확충

-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을 모든 도서(8km 이상 떨어진 도서 → 전 도서)로 확대('18.上)하고, 직불금 단가(55만원→60만원)도 인상
- 소형·영세어선 승선 어선원 피해 구제를 위해 어선원보험 당연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재할급여의 법정 급여화 추진('18~)
* 당연가입 대상 : ('15) 5톤이상 → ('16) 4톤이상 → ('18~) 3톤이상 도입

나. 해양관광·레저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① 마리나 대중화와 크루즈 산업 재도약

- 마리나 대중화를 위해 맞춤형 항로 개발('18.上, 기획연구), 의무보험료 인하*('18.上)를 추진하고, 거점마리나 항만 추가 착공(창원, '18.12)
* 업계 의무보험료 : ('17)선박정원 1인당 20만원대 → ('18)10만원 중반대
- 마리나 연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대형요트(100ft급) 핵심기술 개발('18, 32억원)
* 부산·경남 마리나 비즈센터 타당성 용역 추진('18.2~12월, 3억원)
- 내수면 마리나 대상지 선정, 사업 추진전략 및 관련 제도개선 등 내수면 마리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18.下)
* 내수면 마리나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중('17.6~'18.4)
- 크루즈 시장 다변화를 위해 한-대만 크루즈 항로 운항을 본격화 ('18.上, 3항차)하고, 관광 편의 증진을 위해 크루즈 인프라* 확충
*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준공('18.4), 전용부두 확충('17, 9선석→'18, 12선석)

② 해양치유자원 등 新관광·레저 산업 육성

- 해양치유산업 육성 로드맵*을 수립('18.上)하고, 해양자원의 효능·안전성 검증을 통한 사업모델 개발 및 근거법 제정** 추진('18.下~)
 - * (1단계) R&D('17~'19/'18.16억원) → (2단계) 법제화 → (3단계)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 ** (주요내용) 자원 관리·개발, 인력양성, 해양치유센터 설치, 증장기 육성계획 수립 등
- 수중레저산업(스킨·스쿠버 다이빙) 육성을 위해 해양관광 자원(마리나, 어항 등)과 연계한 「수중레저 기본계획」 수립('18.上)
 - 지자체 일부 해안을 해중경관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수중레저 클러스터 육성 방안마련('18.6)
 - * 해중경관지구 지정기준 마련('18.4), 지자체 대상 공모('18.5)
- 「해양관광 주간」 신설로 해양관광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 해안누리길(53개 노선) 대중주·대표코스* 인증서 발급 등 홍보 강화
 - * 역사(충무공길, 장보고길) 등 이야기가 있는 대표 해안누리길 코스 개발
- 무인 등대를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등대 문화공간 조성」 시범사업 추진(경주 송대말 등대, '18.上)

③ 어촌 관광 활성화

-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촌관광 트렌드 분석('18.8)을 통해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증장기 어촌관광 발전전략*」 수립('18.下)
 - * 어촌관광 빅데이터 분석, 기본방향 설정,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성과지표 발굴 등
어촌마을 체험객 : 100만명('15) → 119만명('16) → 125만명('17)
- 민박, 관광 안내소 등 어촌체험마을의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5개소, 10억원)하고,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마을별 등급 부여('18, 55개소)
- 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자연·문화·역사 등 기반을 활용한 '10대 어촌테마마을' 조성(영광·완도·고흥 3개소/'18, 21억원)

다. 항만을 연안지역 경제의 핵심 축으로 육성

① 해양산업클러스터 본격 개발

- 부산·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 착수('18, 14억원*)

* 총사업비('18~'19) : 416억원(국가 25%, 지방 25%, PA 50%)

- 부산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요·보트 등 해양레저 선박, 첨단 선박부품 제조, 광양은 해운항만물류 R&D 테스트베드(Test-bed)로 특화 개발
- 해양기업 진입 촉진을 위해 국세 등 세제 감면 확대를 추진*하고, 클러스터 입주 홍보 등 기업유치 활동 병행

* 경자구역, 연구개발특구 등 타 특구와 유사한 수준의 세제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18, 조세특례제한법, 해양산업클러스터법)

② 항만 재개발을 통한 해양문화·관광 도시 개발

- (부산북항) 오페라하우스('18.上, 착공), 지하차도건설('18.下, 착공) 등 핵심인프라 건설 및 상부시설 민자 유치 추진

- 북항 인근에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을 연계 개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기본업무협약('18.3) 및 기본계획 수립('18.下)

- (인천항) 수도권 해양관광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관광·레저·공공 기능이 집적된 드림아일랜드 사업 착공('18.下)

- LH, 인천시, 인천항만공사가 참여하는 공공개발방식으로 노후 항만지역(1·8부두) 재개발 추진('18.下, 8부두 상부플랫폼 사업 착수)

- (기타) 광양항 묘도('17.6, 착공), 고현항('18.上, 1단계 부지조성) 재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목포남항, 부산항 용호부두 등은 민자유치 추진('18)

※ 항만과 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구역 확대 등이 가능하도록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제정 검토('18.上)

라. 연안지역 해상교통 선진화

① 해상교통 준공영제 확대

- 해운법령 개정('18.上)을 통해 준공영제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적자항로 등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교통권 보장
 - 항로 단절이 우려되는 적자항로 및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한 운항 수증대 항로(약 10개 항로)를 지원('18, 24억원)
 - * 거리가 멀고 긴급한 수송 요구가 있는 접경지역의 특수성도 고려하여 지원범위에 포함
- 육상 대중교통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추가개선방안, 지자체와의 역할분담 등이 포함된 '중장기 준공영제 확대 방안' 마련('18.下)

② 해상교통 인프라(선박 및 기항지) 개선

- 총 400억원 규모('18, 300억원)의 연안 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조성하여 대형 여객선 2~3척 건조 지원('18, 2회 공모)
 - 연안선박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17, 76억→'18, 86억)하고, 신조·중고선 도입 뿐 아니라 친환경 개조까지 지원 추진('18.下)
- 지역주민 참여 협의체와 이용객 안전·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항지 접안시설 9개소 이상 개선

③ ICT를 활용한 이용자 편의 증진

- 기존 여객선 대표방식인 인터넷 발권(홈켓) 방식을 모바일 발권 방식*으로 개편('18.3, 여수·완도-제주항로 시범사업)

* 고속버스, KTX와 같이 종이 티켓 없이 핸드폰으로 여객선 탑승

4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증장기 목표 (~'22)		해양환경 통합관리 시행(순해역 공간관리)과 수산자원 회복(연근해 어획량 110만톤 회복 / '17, 93만톤)
'18년	정책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제도 정비 ◆ 해양환경 통합관리 체계 구축 ◆ 수산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
	핵심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휴어제 도입 검토, 총어획량관리 대상 확대 ② 해양공간계획 제도 도입 ③ 해양폐기물·쓰레기 관리체계 확립 ④ 수산물 약품 안전성 검사 강화

가. 우리바다 되살리기와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 육성

1 휴어제 등 수산자원 보호제도 강화

-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조업을 중단하는 휴어제 검토* (일본: 5년간 고등어 휴어제 실시후 자원량 1.4배 증가)

* 연구용역 실시('18.1~5), 휴어제 추진방안 마련('18.下)

- 총허용어획량관리*(TAC) 대상어종과 업종을 확대하고, 개별양도성 할당제(ITQ**) 등 신규제도 도입 검토

* 고등어, 대게, 오징어 등 11개 어종, 1,300척 관리 중

** ITQ(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 개별 어업인이 일정량을 어획할 수 있도록 할당하고, 이를 양도·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한 세목망(細目網) 제한을 강화*('18.下)하고, 폐어구로 인한 자원감소 예방을 위해 생분해성 어구 보급 지원('18, 52억원)

* (어종) 18개 어종 → 5~7개 어종, (사용기간) 8~11개월 → 5~8개월

② 수산자원 회복사업과 사라진 어종 되살리기

- 바다 사막화 방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바다숲 3천ha**(’17, 15천ha → ’18, 18천ha)와 **바다목장 5개소 조성**(완도·포항·고창·안산·서귀포)
-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전문생산시설 등 **대량육성체계***를 구축하고 **치어방류 확대**(’17, 30만마리 → ’18, 100만마리)

* 명태 전문 생산동 건립(7.5억원), 해수취수관(16.5억원)

- 수산자원조사선 **지속 확충***(’18, 1척 준공), 수산자원 정밀 조사·평가를 위한 **전문인력**(’17, 8명 → ’18, 10명/2명 ↑) **확충**

* 조사선 확충 계획 (누계): (’14) 1척 → (’15) 2척 → (’18) 3척 → (’20) 4척

③ 연근해 어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연근해 특성을 고려하여 「**제2단계 감척 기본계획**」(’19~’23)을 수립* (’18.12)하고, 감척대상 확대(’18.上, 32개 업종 / 9개 어구 감척 추진)

* 연구용역(~’18.8) → 의견수렴 및 기본계획 수립(’18.12) → 시행(’19.1)

- 저비용·고효율 차세대 **표준어선**을 개발(’17~’20, /’18, 42억원)하고, 노후 어선 대체건조(’18, 8억원) 및 **노후기관·장비 교체 지원**(’18, 57억원, 국비30%)

- 어선원의 안전·복지설비 개선을 위해 **어선등록제도*** 개정 검토

* 어선등록제도(길이기준) 시범운영(’17.3~’18.5) 및 기준(안) 마련(’18.12)

- **영세 연안어업** 지원을 위해 **품목별 생산자단체 자조금 지원 확대** (정부지원 50%, ’17, 6억원 → ’18, 10억원)

* (’17) 꽃게, 갈치, 붉은 대게 3종 → (’18) 대하, 문어, 참조기 등 6종으로 확대

- 어업인 스스로의 어획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활동 의지가 부족한 공동체는 **퇴출**

* 퇴출 기준 : 자율관리 공동체 참여율, 활동실적 등 종합평가를 통해 결정

나. 수산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

①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 추진

- 원산지 표시 이행을 제고를 위해 **매월 원산지 특별단속 시행**
- 외국산 저가 소금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천일염 산업 육성을 위해 **가공품의 식염 원산지표시 의무화 추진**

* 김치류·절임류의 식염표시 의무화 특례 신설 /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개정('18. 上)

② 수산물이력제 확대

- 국민 건강 우려가 높은 대중성 품목을 대상으로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18.下)
- **수산업·단체***,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체계(MOU 등)를 구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홍보** 및 온·오프라인 소비촉진**

* 업종별·지역별 수협 등 생산자단체 및 수산물 대량 소비자 등

** 방송 PPL, 대형유통업체, 지역축제, 국제식품박람회, 해양수산·양식·식품·박람회 등

③ 수산물 약품 등 안전성 검사 강화

- 분석장비 확충*(‘18, 60억원)으로 **안전성 검사율 제고**(‘16, 11%→’19, 20%)

* 수과원, 수품원, 경남 등 4개 지자체(‘17) → 충남, 제주 등 6개 지자체 추가(‘18)

- **수산약품 실태점검***을 강화(연 1회→2회)하고, 넙치·뱀장어 등 대중성 어종 양식장, 부적합 이력 양식장(연 1회 이상) **특별 관리**

- 유해화학물질 사용 양식장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신설****(‘18.上)

* 해면양식장 : 1차 위반 (현행) 경고 → (개정) 출하정지 30일

** 육상양식장 : 1차 위반 (현행) 없음 → (개정) 출하정지 30일

- 수산물의 **법정전염병을 확대 지정**(20→23종)하고, 냉동·냉장 새우류에 대한 **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18.4)하여 **질병 관리 강화**

* (‘17)잉어봄바이러스 등 20종 → (‘18)괴사성체장염, 급성간체장괴사염 등 3종 추가

다. 해양공간 통합관리 체계 구축

① 해양공간 통합관리 확대

-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해양공간계획법」 제정('17.8, 발의)을 추진('18.上)하고, 남해안을 대상으로 공간계획 수립* 착수
 - * 경기만 시범해역('16~'17) → 남해안('18~'19) → 서해안('19~'20) → 동해안('21) 전역
- 각 해역의 정보와 핵심가치, 용도구역 설정 결과 등을 포함한 남해안 해양공간계획도 제작 및 「계획지원시스템*」 구축('18.12)
 - * 관련 정보의 종합분석, 핵심가치, 특성평가 결과, 용도구역 설정 등 의사결정 지원
- 해양수산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관련 정보 148종을 통합('21년 까지 283종 통합)하고, 민간개방을 위한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운영('18.下)

② 해역이용협의제도 강화

- 해양환경 영향에 대한 사전예방적 평가·협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해역이용영향평가법*」 제정('17.9, 발의) 추진
 - * 계획평가제도 도입, 사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강화, 협의완료 전 사전공사 금지 등
- 평가 항목 재분류, 평가 내용의 현실화·구체화 등을 위해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해수부 고시)」 개정('18.6)
- 해역이용협의 검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분야별 전문기관*, 관련 부서 등이 해역이용협의 검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18.6)
 - * 수산자원(수산과학원), 해양환경(해양환경관리공단), 해저지형(해양조사원) 등

라.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

① 해양환경 위해요소 관리

-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 강화를 위해 연안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특별관리해역 방류수 기준 강화 등을 추진(환경부 협조)
 - * 하수도보급 취약지역(해남·신안 등), 공단지역(안산·창원 등)의 오염저감시설 확충

- 발전소 냉·온배수 관리방안*을 마련('18.6)하고 해양시설의 위험유해 물질 배출 현황조사('18.12)를 통해 신규오염원 관리 강화
 - * 냉·온배수 배출기준 설정, 관리체계 구축, 부담금 부과 등
- 미세먼지 현황 파악 및 통계구축 등 해양대기환경 관리 강화를 위해 주요 항만 대상 해양대기환경측정망 구축 추진
 - * 선박·항만에서 발생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SOx, NOx, CO) 및 온실가스 유발물질(CO₂)을 조사하고, 대기환경변화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관리정책 수립에 활용

② 해양폐기물·쓰레기 관리체계 확립

- 「해양폐기물법*」 제정('17.6, 발의)을 통해 해양폐기물 등의 주기적(발생 - 수거·처리 - 유효활용 - 모니터링) 관리 체계 확립
 - * 해양배출 금지, 폐기물 해양유입 차단, 해양폐기물·해양오염 퇴적물의 실태 조사·수거정화 및 유효활용, 해양폐기물관리업 등
- 해양쓰레기의 발생원부터 수거·처리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관리 종합대책' 마련('18.下)
- 반폐쇄성 해역의 오염퇴적물을 수거*(연중)하고, 오염퇴적물 정화해역의 환경개선효과 제고를 위해 육상오염원 차단 및 사후관리 강화** 추진
 - * '18년: 본사업 2개소(울산 장생포항, 포항 동빈내항)/ 설계 3개소(부산 김천항·옹호만, 경남 통영항)
 - **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범위 등에 관한 규정(해수부 고시)」 개정('18.2)

③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

- 서식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 해양생물(現 77종)을 추가 지정('18.10)하고, 멸종우려 종(種)에 대한 증장기 복원 방안* 마련('18.5)
 - * 우선증식 대상종을 선정하고, 인공증식 및 개체수 회복 등 단계적 관리방안 등
- 해양생물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인공증식 개체의 방류·서식지내 위협요소 제거** 등 시행(연중)
 - * 명칭변경(보호대상 해양생물→해양보호생물), 주요 해양생물 대상 기념우표 발행 등
 - ** 독도 갯녹음 원인생물 제거(7월), 물범 인공휴식지 조성(10월) 등

- 해파리 폴립, 갯끈풀 등 유해생물 제거(상시) 및 갯생이모자반 피해저감을 위해 예찰·예보를 통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추진
 - * 대응매뉴얼 마련('18),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예측기술 개발('18~'19) 등
- 훼손, 오염된 갯벌의 생태계 개선을 위해 복원사업을 확대*하고, 체계적 복원·관리·활용을 위해 「갯벌법」 제정('17.8, 발의) 추진
 - * 순천 등 2개소의 복원사업 완공,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후 신규사업지 선정
- 하구환경 개선을 위해 수질자동측정소*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체계적 복원·관리를 위해 「연안하구법」 제정('17.9, 발의) 추진
 - * 연안하구 및 오염해역 등을 대상으로 총 18개소 설치·운영 중

4 해양환경 관리기반 강화

- 대형 유류유출 사고에 효과적 대응하기 위해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 착수* (5천톤급 1척, '18~'20, 758억원/'18, 22억원)
 - * ('18) 기본설계 → ('19) 상세설계·건조 → ('20) 건조완료, 실해역 배치
- 해양환경 조사·분석 기능강화를 위해 국제규격의 실험실을 갖춘 (가칭)해양환경조사센터 건립 추진('19.2 준공, 130억원, 부산영도)
-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효과, 해외사례 비교분석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질적 개선 추진
 - * 해양보호구역 내 활동관리, 지자체의 관리계획 이행의무 확보방안 등
 - 지역중심 자율적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해양보호구역 관리 체계화* 도모
 - * 지역관리위원회 간 네트워크 구축·확대 및 지역별 우수사례 공유 등
- 한반도 주변해역의 환경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한-러('17.12), 한-일('18.10) 정기운항선을 활용한 수질측정망 운영(연중)
-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증진과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해양환경 명예감시원 제도* 도입(~'18.12)
 - *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해양환경명예감시원 및 감시단체 운영규정」 제정

5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안전한 바다를 실현하겠습니다.

증장기 목표 (~'22)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및 해양사고 30% 감축
'18년	정책방향	◆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역량 확충 및 한·중협력 강화 ◆ 취약선박 중심 사고·재난 예방
	핵심정책	① 대형어업지도선 신규 투입 및 한중 공동단속 시스템 운영 ② 어선·낚시어선 안전대책 이행 ③ 항만·어항 내진·침수 보강

가. 해양영토 관리기반 강화 및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1 해양영토 관리 거점 마련

- 영해 외곽 영구시설물*을 추가 설치(홍도 등 3개)하고, 종합해양과학 기지 체류연구 확대 추진('17, 이어도 → '18, 이어도, 소청초)
- * (~'17) 외간서 등 8개 ('18) 홍도, 고서 등 3개 ('19~) 거문도 등 11개
- 화순항 해경부두 완공('18.12), 흑산도항 해경·어업지도선 부두 착공('18.12) 등 해양영토 관리 인프라 확충
- 전국 무인도서 전수조사 및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미등록 무인도서 발굴, 관리유형 지정, 토지등록 등 관리 강화
 - 국가·지자체의 공공사업이 가능하도록 「무인도서법」 개정을 추진('18.8, 국회제출)하고, 무인도서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18.11)

2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강화

- 1,500톤급 어업지도선 4척을 신규 투입('18.10)하고, 단속정 승·하강 장치 등 장비 보강 및 단속 인력(88명) 확충
- 한·중 협력을 통해 「한·중 불법어업 단속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영('18.1)하고, 공동 순시와 단속 공무원 교차승선도 재개('17, 일시 중단)
- * 중국어선 불법행위 증거를 실시간 시스템으로 한·중이 공유

③ 독도 관리 강화

- 독도와 주변해역에 대한 **현지조사 강화***(연 2→4회) 등을 통해 독도 생성원인 등을 규명하고, **해양영토 관리기반 강화**
 - * 독도-울릉도 해저 퇴적물·지각구조 연구, 화산체 암석 분석 등
- 독도 탐방(사회적 배려층 등), 민간단체 지원*, 독도 강사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한 **대내·외 인식 확산과 홍보 확대**
 - * 독도 해양영토 아카데미, 민족의 섬 독도사랑 캠페인, 독도 수중정화 활동 등 지원
- **독도 관련사업의 체계적 연계·조정**을 위해 독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반영사업 **성과평가*** 및 **환류 등 통합관리 체계 구축**
 - *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독도관련 정책사업 성과 평가 실시('18.1~5월)

나. 출중한 해양사고 예방체계 구축

① 여객선·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

-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선박 및 소형선박에 중점을 둔 「**연안선박 해양사고 종합안전대책***」 수립·시행('18.2)
 - * 기관고장 등 다발사고 예방, 현장 확인 강화, 사전교육 확대, 안전설비 개선 등
- 對국민 공모를 통해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을 위촉(15명 내외, '18.2)하고, 반기별 **민·관 합동점검**
- **낚시어선 안전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선박이라는 관점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화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18.上)
- **어선 안전관리 법령 체계화**를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제정을 추진하고, **연근해 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 추진('18.下~)
 - * '18~'20 / 총 298억원('18, 100억원) / 연근해 쏜해역(최대 200km)에서 모니터링·관제·통신

② 해양 안전관리체계 강화

- 취약선박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 중심의 「국가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18.2)하고, 계절별 해상교통안전 종합대책 추진
- 해사안전감독관 1인이 배치된 항만에 감독관 인력을 증원('17, 36명 → '18, 40명)하여 2인 1조 감독관 체제(운항, 감항)를 구축
- 조류신호표지(3개소), 항로표지(20기)를 설치('18, 76억원)하고, 협수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통항 안전성 평가 및 제도개선(속력 제한 등) 추진
 - * 1단계(대상선정: '18.1) → 2단계(안전성 평가: '18) → 3단계(기타 연안수로 확대: '19~)

③ 선박 안전성 확보

- 선박검사 이후 상태유지 의무 위반으로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선주 처벌규정 신설('18.6,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선박검사원 자격조건 정비, 선박 용도변경 허가절차* 및 검사기준 강화** 등을 통해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선박검사체제 구축('18.6)
 - * 용도변경·개조계획 사전검토 등 「선박안전법」에 따른 변경허가절차 강화
 - ** 선령에 따른 현장 검사원 증원, 두께측정범위·검사대상 확대 등

④ 종사자 인적과실 방지

- 선원 피로관리, 문서간소화 등 인적과실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14~'18, 72억원/'18, 15억원)하고, 교육기관·업계를 통해 현장적용('18.下)
 - * 인적안전관리 시스템, 국제기준에 부합한 선원훈련·교육프로그램 개발
- 선사 CEO를 대상으로 해양안전리더 교육을 시행('18, 330명)하고 선원·육상 종사자 등에 대한 집합·안전교육 추진('18, 5만명)

⑤ 국민 참여형 해양안전문화 확산

- 전문 해양안전 체험시설인 **해양안전체험관**(경기 안산)과 **국민해양안전관**(전남 진도) 착공('18.6)
- 워터파크와 연계한 해상 생존체험장 시범사업('18.1)과 '찾아가는 해양안전 교실*' 운영을 통해 사고 대응 능력 향상 및 안전의식 제고

* 강사양성 132명, 학생·일반인 교육 55,000명

다. 해양재난·재해 피해 예방 등

① 지진·태풍 등 자연 재해 대응능력 강화

- 항만 시설 내진 보강을 지속 추진('18, 306억원, 목포·포항 등)하고, 내진설계기준 개정과 해양수산 지진 매뉴얼 보완('18.下)
 - 어항 내진성능평가('18, 15억원, 176개소/'19년 완료)를 시행하고, 내진 성능 개선 지속 추진('18, 108억원, 안홍항 등 2개소)
 - 경주('16.9) 및 포항지진('17.11) 후속대책으로, 육상과 연계하여 동해 남부 연안해역의 해저 활성단층지역 조사 시행('18, 5억원)
- * 육상지역을 조사 중인 행정안전부 등과 협업체계 구축
- 태풍·이상파랑 등에 대비하여 방파제를 보강('18, 520억원, 포항신항 등)하고, 항만 침수방지시설 정비('18, 394억원, 군산항 등)

② 항만·어항 안전시설 보강

- 노후 항만시설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17개소, '18, 73억원)하고, 차막이·안전난간 등 항만 안전시설** 확충('18, 35억원)
 - * 포항항, 동해목호항, 평택당진항 등 17개소 / ** 마산항, 완도항 등 3건
- 어항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구명사다리 등 안전시설물 확충(10개항, 20억원)하고, ICT기반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5개항, 15억원) 운영

③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양예보·예측 정확도 개선

- 파랑·조류 등 빅데이터를 분석('18~/'18, 15억원)하여 해양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해양 슈퍼컴퓨팅 도입 검토('18.下 예타추진)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연안침식 발생가능성·발생구간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반 연안침식 예측지수 시범개발('18.12, 0.5억원/해운대)

④ 선제적·과학적인 연안침식 대응

- 연안침식 저감공법 개발 등 연안침식 R&D('18~/'18, 20억원)를 추진하고, 연안지형 변화 예측모델 개발·보급('18.5)
- 주요 연안 250개소 침식 모니터링*과 3차원 연안공간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 탑재용 수심측량장비** 국산화 개발 추진
 - * 기본 모니터링(250개소), 실시간 비디오 모니터링(39개소), 파랑 모니터링(5개소)
 - ** 선박 접근이 어려운 낮은 수심의 해역 조사장비 개발('15~'19 / '18, 30억원)

⑤ 해양사고 대응능력 강화

- 해양사고·오염 시, 해경선·방제선 등이 신속 출동할 수 있도록 정박 부두 위치를 조정하고, 예·도선·관공선 관리부두 확충 계획 수립('18.10)
- 대형·고난도 해양 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구조·구난 공단 설립 방안 마련(~'18.下, 보험사·선주 운영비 분담 등)

⑥ 세월호 조사·가족 지원 강화

- 선체조사위, 2기 특조위 조사활동 지원 및 미수습자 가족, 피해자 가족 지원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운영('18.1~)
 - * 세월호 지원업무의 신뢰 제고를 위해 후속대책추진단장에 민간전문가를 채용하고, 기존 「선체수습과」, 「대외협력과」를 「수습조사지원과」, 「가족지원과」로 개편
- 세월호 선체직립 완료(선체조사위 주관, '18.1~6) 후, 미수색 구역(보조기관실 등)에 대한 미수습자 수색 재개
- 미수습자 가족 일상복귀 지원(심리치료 등) 및 안산 분향소('18, 27억원), 인천 일반인희생자 추모관('18, 2.5억원) 등 추모시설 운영 지원 등 추진

6 해양문화를 확산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중장기 목표 (~'22)		親해양문화 정착과 국제기구 주도국가로 위상 제고
'18년	정책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해양문화 점점 확대 ◆ 극지·대양연구 실용화 추진 ◆ 해양수산 국제기구(IMO, FAO 등) 선도
	핵심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추진 ② 「극지활동진흥법」 제정 및 이사부호 활용 강화 ③ 세계 수산대학 시범사업 수행

가. 親해양문화 확산 및 관련 인프라 확충

1 해양문화 저변 확대

- '해양문화 종합로드맵('18~'23)'을 수립('18.上)하고, 체계적인 해양교육 추진
 - *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률((가칭)해양교육진흥법) 제정 또는 개정(해양수산 발전기본법) 추진('18.12)
- 「찾아가는 해양교실*」을 운영하고, 해양직업 체험동영상** 제작('18, 10편)을 통해 학생대상 해양교육과 진로탐색 기회 제공
 - * 해양수산전문 강사가 초·중·고 강의 / ** 해양수산분야 주요 직종 10개 선정
- 「복합형 해양레저 체험교실」을 확대 운영*(2→3개)하고, 찾아가는 생존교육('18년 6만명), 관련교재 발간 등을 통해 생존수영 보급 확대
 - * '17년 2개소(상주시 낙단보, 상주보) → '18년 추가(울산 진하해수욕장)

2 중요 어업 유산 등재

- 어업 유산발굴을 위해 쏠해역 실태조사를 실시(~'18.10)하고, 발굴된 어업 유산은 국가·지방 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
- 국내 최초로 세계 중요어업유산(FAO)에 해녀어업 등재 추진('18)
 - * 중요어업 유산 등재 제안서 작성('18.上), 국제 동향 파악·해녀어업 소개('18.下)

③ 해양문화시설 확충·내실화

- 해양문화 인프라 확대를 위해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추진(예타, '17.9~)
 - * '19~'23년 / 인천 중구 / 부지 27,335㎡(건축 22,588㎡) / 1,315억원(국비 1,145, 지방비 170)
- **국립해양과학교육관**(울진, '15~'19, 1,045억원/'18, 265억원) 개관에 대비하여 과학관 전시·운영을 위한 **세부운영방안** 마련 추진('18.下)

나. 해외 해양수산 자원 확보 및 대양·극지 연구 선도

① 심해저 광물자원 상용화 준비

- 인도양 해저열수광상 광구 정밀탐사('18)와 서태평양 망간각 광구(3천km²) 계약체결('18.上) 등을 통해 **심해저 광물 자원 확보**
- 「**심해저활동법**」 제정('18.上, 국회제출)을 통해 국제 계약 체결을 위한 국가 보증절차와 지원 근거 마련 추진

② 해외 어장 확보 및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

- **해외어장 자원조사**(2~3개 수역, 14억원) 등을 통해 **신규 어장 개척**
 - * '17년 자원조사 실적 : 태평양(오징어), 남빙양(이빨고기) 자원조사 추진
- 키리바시·피지 등과의 ODA 사업과 대러 수산투자(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 등)* 확대 등을 통해 **원양 쿼터를 확보하고 입어조건 개선**
 - * 한·러 어업위('18.上), 동방경제포럼('18.下) 대응 등 정부간 협력 강화 및 민관 T/F 운영
- 국적선 위주 단순 조업에서 **합작·양식·가공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고차 산업화** 지원을 위해 「**제3차 원양산업 발전 종합계획**」('19~'23) 수립('18.下)
- 원양산업 발전방안, 선사별 안전 관리체계 구축, 합리적 처벌 규정 등을 반영한 「**원양산업발전법**」 전면 개정 추진('18.下)

- 노후 원양어선 대체를 위해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 지원대상 확대 ('17, 신조선 → '18, 신조선·중고선 구입)
- 조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기별·지역별 조업 패턴을 분석하고, 어장형성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 정보제공 지원
- * 조업시기 및 수역, 조업형태, 어군 이동경로, 어획물 수급, 수산물 가격 등 조업 관련 정보 축적 시스템 구축('16~'18, 9억원)

③ 대양연구 지평 확대

- 민간 대양연구 참여와 연구 시너지 확대 등을 위해 이사부호 등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18.上) 추진
- * 산·학·연 융합형 과제 도출, 첨단장비 기술인력 등 인재양성 연계 프로그램 마련 등
- 이사부호를 활용한 북서태평양 태풍경로 예측('17~'21) 등을 수행하고, 북극-동아시아 등 해양기후변화 관측망 구축('18, 기획 연구)
- 세계 해양탐사사업('21~'30) 참여를 위해 정부간 해양학위원회(IOC)와 MOU를 체결('18.上)하고,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18.下)

④ 극지연구 기반 강화

- 「극지연구 중장기 로드맵」('18.上)을 마련하고, 극지 미생물 기반 항생제 개발, 한반도 기후변화 원인규명 등 과제 발굴
- 「제2차 북극정책 기본계획('18~'22)」 수립('18.上) 등 극지연구 강화 뒷받침
- * 극지연구기관 역량강화·지원 등을 위한 「극지활동진흥법」 제정 추진('18.下)
- 세종과학기지 준공 30주년 행사('18.1), 극지체험전시회('18.9), 북극 협력주간('18.12) 등 국민 참여와 관심 유도

다. 해양수산 국제 위상 강화

① 해양수산 국제기구(IMO, FAO 등) 선도

- IMO 협약 등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재)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에 해사 안전연구소(연구원 4명)를 설치하고, 국제회의*에도 주도적으로 대응

* 아·태 e-Nav 국제 컨퍼런스('18.6, 서울), e-Nav 컨퍼런스 조정총 운영 제19차 국제항로 표지협회 컨퍼런스('18.5월, 인천) 개최

-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한국 FAO 사무소 설치, 국제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제 수산 규범논의 주도

* 시범사업('17.9~'19.2) 후 FAO 총회('19.6)에서 설립 여부 결정

** WCPFC 제14차 과학위원회('18.8, 부산), FAO 자원이용·어업권 국제 컨퍼런스('18.9, 여수)

② 공적개발원조(ODA) 전문성 강화

- 해양수산 ODA사업 전문관리기관을 선정*하여 체계적인 연안 개도국 지원 추진('17, 56억원 → '18, 91억원)

*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위탁 근거 마련

- ODA관련 민간 전문가 Pool 구성·운영('18.1)과 전문인력 양성기반* 마련('18.上)을 통해 ODA와 연계한 민간 기업 진출 지원

* 해양수산 ODA 교육과정 마련(KOICA, 20여명), ODA사업 민간전문가 파견

③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 협력 등 추진

-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기술·정책적 협력 확대 등을 위한 한-EU 공동선언문 채택, IUU 관련 워크숍 개최* 등 국제 네트워크 조성

* 태국, 대만 등 IUU 근절 MOU 체결국, 유관 업·단체 등 초청('18.10)

- 시에라리온 등 연안국 IUU 어업 감시시스템 구축 지원('18~'22, 28억원/'18, 2.4억원), 선진 조업감시 기법 전수 등 국제협력 확대